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근거는 밝히지 않고 엄청난 피해액만 강조한다는 점이다. 계산법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니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감히 업무도 못 내는 고차원적인 계산에 의해 산출한 수치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식이다. 그리고 이런 수치를 들이대면 기자, 교수, 정치인 등 이른바 전문가들도 무조건 수긍하고 이런 수치를 인용하기 때문에 저절로 권위가 생기는 이점이 있다.

최근에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인문학 전공을 통해합하는 구조조정을 강행하자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학교 공사장 크레인과 한강 철교에 올라가 시위를 하는 등 노사분규 현장에서 익히 보아왔던 장면들이 연출되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해당 학생들에게 퇴학 등 중징계를 내리면서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학생을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등롱급 얼마씩을 내는 단순한 인적 자원으로 보는 비교육적 발상이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처사가 아닐까?

노벨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른 유명한 가수 박 달린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다. "미국 가수를 가운데 당선처럼 노래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 노래하는 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 약 136명쯤 됩니다."

대 인간의 총체적 접촉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문학의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것은 생활년도에 논산훈련소를 무대로 벌여주는 소극을 보는 것처럼 안쓰럽다. "아, 너 뭐하다 왔어?" "대학에서 철학을 했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것들

자, 이 수치는 주로 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졸업 후의 직업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학교육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는 근거로 인용되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재벌이 운영하는 대학의 경영진이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로 이것을 써먹는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걸핏하면 이 수치를 들이대며 대학교육의 비효율성을 비판한다.

몇 년 전 인문학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었을 때 전국대학 인문학연구조합의 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의 주제는 '인문학의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이었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인문학 전공자들이 모여 '인문학도 따지고 보면 돈이 되는 학문'임을 애써 강조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인문학의 가치를 경제학의 패러다임에 대입시켜 '인적자산'이라는 개념으로 계산서를 뽑아내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처럼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럴 식의 계산과 수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정확한 계산법이나 학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철학 한번 해봐, 실사!"

그런데 이런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이 세상의 모든 직업에 일치하는 전공이 대학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 농부나 어부, 청소부, 광부, 운전기사, 가정주부가 모두 대학의 해당 학과를 나올 수는 없으므로 이 수치는 이른바 전문직에만 적용

되는 원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정치학과 출신은 몇이나 되는가? 그리고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 가운데 신문방송학 전공자는 몇 %나 될까?

인문학이나 교양이란 물질적 재화나 상품처럼 돈으로 따질 수 없고, 교육은 인적 자원의 수요 공급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

학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철학 한번 해봐, 실사!"

《영남대 특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교총도 반대한 교육정책, 개선 서둘러야

교육현장의 여론을 무시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교육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비리에 관승한 교장공모제 확대,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 등 정책을 내놓자 오는 30일까지 교원 16만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에 동조해 온 교총마저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교과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들이 그만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교총이 긴급과제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를 표한다.

연 4회 의무화된 수업공개에 대해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의 이유가 있다고 본다. 공개수업을 일률적으로, 그것도 의무를 달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과 형성성의 논리에도 모순이 된다. 교과부가 제시

산단 클러스터 퇴출·졸업제 시기 상조다

정부가 산업단지 클러스터 자생력 강화를 위해 도입기로 한 퇴출·졸업제 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그동안 정부 주도로 성장해 온 산업단지 클러스터에 퇴출·졸업제도를 중간으로 하는 '산업단지 클러스터 자생력 강화 시스템'을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81개 미니 클러스터(MC)에 대해 매년 평가를 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고, 5년 이상 됐거나 우수 MC는 졸업시켜 민간주도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잘되는 MC는 졸업시키고, 안 되는 MC는 퇴출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MC 퇴출·졸업제는 기업들에게 중간 정도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특히 우수기업을 졸업시켜 민간주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각종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MC 기업이 의욕적으로 경영을 하겠는가.

MC 퇴출제 시행은 당장 광주지역 MC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됐다. 광주 MC는 정부 지원이 5년 이상 된데다, 최근 평가(2009년 4월~2010년 3월)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내년부터 각종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기업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제 겨우 성장단계에 접어든 광주 MC는 한계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MC 자생력 강화 계획은 영재의 자질이 있는 학생을 둔채로 내모는 것과 같다. 또한 성공시책 가운데 하나인 MC 제도를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다. 정부는 MC 졸업제만큼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경쟁을 통한 자생력 강화도 좋지만 현실을 무시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 유망기업조차 고사시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이

無等鼓

'봉살활동이나 자선사업 등에 기부금을 내어 돕는 사람'. 애초 '스폰서'(Sponsor)는 이처럼 순수하고 긍정적인 의미로 출발했다.

최근 '색바랜' 스폰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부산지역의 한 건설업자가 오랫동안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검사들에게 떡값을 돌리고 향응을 베풀었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의 소용돌이가 커지고 있다.

호감을 갖고 출발한 스폰서는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모습이 바뀐다. 즉 미국에서 상업 방송이 시작되었을 때 스폰서가 광고주라 는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본래 지니고 있던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

스폰서는 '힘'이 있는 곳을 찾게 된다. 스폰서로 불리는 일부 재력가들은(소수에 국한되지만)정치권과 행정부, 법조계 고위 인사 등 이른바 권력층에 접근해 금전 제공 등으로 친분을 맺고 필요할 때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스폰서



문제는 스폰서십의 밑줄이 깨질 때다. 이번 부산발 스폰서 파문은 후원자 역할을 해왔던 건설업자 정모(52)씨가 그동안 뒤를 봐주었던 인사들이 홀대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명단을 폭로하면서 비롯됐다.

스폰서십의 측면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이 이른 셈이다. 급기야 검찰은 진상규명위를 설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지만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은 달콤한 스폰서의 유혹이 있을 때 이 말을 한 번 떠올려 볼 일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박치경 시회1부장 unipark@kwangju.co.kr

기고

서종진



광산의 뿌리 송정권의 영 영화를 다시 찾자는 열기가 뜨겁다. 송정권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은 광산을 있게 한 근원을 다시 되살리자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지역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 송정권은 광산의 중심 변화가로 화려한 번영을 누렸지만 결국 도시 공동화 현상을 거스르지 못했다.

이것이 무덤다짐을 하면 그 결과는 뻔하듯, 광산로는 거대 자본의 방식으로 경쟁하면 백전백패다. 광산로는 지역의 고유한 색깔로 승부해야하며 그 핵심은 '사람 냄새 나는 여유로운 문화'라고 생각한다. 멋들어진 게 가꿔진 거리를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걸으며 맑은 지갑이지만 편한 기분으로 소풍을 즐기고 가족, 지인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이러한 차별성을 구축해야만 2014년 KTX 호남

송정권 '차 없는 거리' 조성 쇼핑 명가로

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자 다양하게 추진했던 사업에 비해 큰 성과를 보지 못한 광산구는 변질한 연구 끝에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단절과 파괴가 수반되는 기존의 개발이 아닌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복원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가 숨 쉬는 곳으로 재생시키는 것이 개발 계획의 주요 뼈대다.

선 완전재통과 맞물려 진행되는 거대 자본의 역세권 개발과 경쟁할 수 있다. 의정부 행복로, 원주시 중앙로, 대구시 동성로, 울산시 옥동로 공통점은 구도심으로 한때 쇠락했지만 지금은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것에 있다. 원주시 중앙로의 경우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유통인구가 10~20% 증가하고 하루 평균 매출도 10~5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개념의 개발계획에 중앙정부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으며, 결국 2007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공모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에 '남도 난장 및-맛의 거리' 프로젝트가 선정돼 지금까지 3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현재 광산구는 2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접근성을 높이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의 예술가들을 초청해 흥겨운 예술축제를 매주 금요일 개최하고, 산하 공무원과 그 가족, 지인들이 광산로를 포함한 송정권에서 경제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규모와 화려함'을 꼽는다. 그러나 그것은 막대한 유통성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일적인 시스템을 갖춘 거대 자본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어른과 아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소용없다. 송정권의 부흥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쇠락을 거듭하는 광산의 뿌리 송정권을 되살리는 유력한 방안이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모두가 싶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광산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엘리베이터 이용료 아파트마다 제각각...상한선 필요

동생이 이사를 한다기에 도와 주러 갔다. 워낙 짐도 간소하고 이삿짐 업체에 사다리차까지 부를 정도가 안돼서 엘리베이터만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무려 15만원이나 내라고 했다. 보통 이사를 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3~5만원 안팎이었다.

리미된 물어주면 될 일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됐다. 어쨌거나 엘리베이터를 사용 안 할 수 있었고, 또 그 아파트 규약이 그렇다고 하니 동생은 별 수 없이 15만원을 주기는 했다. 이런 것도 결국 주민 간 갈등의 요인이 되니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선을 뒀으면 좋겠다. <김재형·광주시 북구 북동

15만원이라니 도무지 납품이 안 된다. 이사를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 그 수

기고

박정진



학교급식은 성장 발육기의 아동들에게 심신발달에 필요한 영양공급과 편식 교정 등 올바른 식생활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해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집단급식이다. 이는 1992년 학생복지와 학부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확대 실시한 이래 최근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학교 교육의 한 분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리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났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에서는 2007년 이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문제로 부정 의혹이 발생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이는 G2B(전자조달 시스템)를 이용한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식재료 구매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광주의 학교급식시설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학교급식 시설·설비의 노후화

선진 급식정책 교육 경쟁력 키운다

향상과 무상급식 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초·중·고교의 올해 무상급식 비율만 보더라도 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인 36.3%다. 특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은 광역시 교육청 중 1위, 전국 시·도 교육청 중 2위의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에는 그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는 시종록 위험을 증가시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총 366억 원을 집중 투자해 학교급식 시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광주는 또 전국 최초 초등학교 1·2·6학년 무상급식 등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우선 위탁급식을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위탁급식 제도는 1996년 학교급식 시행 초기 교육재정 형편상 급식시설 확충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됐으나, 직영급식보다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범이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시행 초기부터 급급 위탁급식을 지양하고 직영급식을 확대했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를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결식학생 '제로화'를 위해 2008년 전국 최초로 빛고를 결식학생 후원 재단을 설립하고, 자치단체, 기업,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공익기금을 조성해 결식학생 '제로화'를 실현했다. 친환경 식재료 확대 정책도 우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06년에 처음으로 친환경 급식을 시작해 올해에는 144개교에 34억 원을 확대 지원하는 등 친환경 급식 지원에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재료 구매 방법의 투명성을 확보해 급식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시·도에서 식재료 납품 비

학교급식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사업 중 하나다. 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선진 급식정책을 통해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학생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주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SUV 차량과 추돌사고 승용차 보상액 올라야

얼마 전 TV에서 실험하는 것을 보니 SUV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았을 때, 승용차를 추돌했을 때보다 수리비가 3배나 많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추돌사고가 났을 때 반한 차가 더 많이 부서진다고 생각하지만 앞차가 SUV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승용차가 승용차를 받았을 때, 범퍼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충격을 흡수한다. 하지만, 승용차와 SUV일때 받힌 SUV차는 멀쩡해

도 뒤에서 들이받은 승용차는 본넷트가 폭 쪼그러져 들어가면서 심하게 파손된다. 이는 승용차가 SUV를 뒤에서 받았을 때, 아예 SUV 차량 아래로 들어가 버리는 이른바 '언더라이드'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앞으로 언더라이드 현상이 생기는 SUV의 보험료를 올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승용차의 피해 보상액을 올려줘야 한다. <김성강·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www.kwangju.co.kr